

권두언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지명되었을 때부터 편향성 논란을 초래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옹호는 무시한 채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는 서울 퀴어문화축제와 그것을 혐오하는 맞불 집회에 모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계적 중립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혐오에 손을 들어 주는 것입니다. 권두언을 쓰고 있는 현재, 안 위원장을 보좌할 수 없다고 인권위 간부들이 줄줄이 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인권위원회가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한편,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것을 규탄하는 시위대의 목소리가 길게 이어져 왔습니다. 참정권이 침해되었으니 문제를 지적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중에는 문제의 원인이 중국과 중국인에게 있다는 식의 혐오가 섞여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주권을 핵심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라지만, 국민이 아닌 사람을 혐오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그런 민주주의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집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의 인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해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선진국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서로 주판알을 튕기며 이익 계산에 몰두하는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 행위를 보면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분쟁지역 주민들의 인권은 국제현장의 문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인권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향상되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가 많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인권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교묘해졌을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더 깊은 인권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고, 우리 학술지인 『인권연구』가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번 호에도 보석 같은 글들이 실렸습니다. <한국 인권연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는 지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에서 ‘인권’ 키워드로 검색된 학술논문 10,739편을 분석한 논문으로, ‘우리의 인권 연구’가 관심을 가져온 분야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흐름은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연구의 힘은 각 연구자가 자기의 관심 주제를 탐구하는 것이 시대의 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밝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판단의 남성중심성과 이성애규범성>은 ‘법의 세계’에서 남성의 성폭력 피해에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남성 간 성폭력’ 24건을 다룬 매우 드문 연구인데, 이를 위해 위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연구 결과를 보면 ‘이성 간 성폭력’에서 나온 것과 다르지 않은데, 결국 한국의 법원은 남성중심성과 이성애규범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두 가지를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에 관한 고찰>은 기존의 국제인권법 체계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처한 발전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발전권이 규정된 국제협력 의무가 국가 중심의 협력과 행위 의무를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어 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노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국가 중심의 협력을 넘어 민간 부문까지 포괄하는 글로벌 의무 주체의 공동 대응을 위한 원칙을 모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인권이 실천되는 현장은 결국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람이 몸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인권보장체계의 역할>은 경남 사례를 중심으로 광역지자체의 인권행정을 분석한 소중한 연구입니다. 저자는 다양한 평가지표의 분석과 행정지원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꼼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함께 실린 두 편의 현장논단과 네 편의 서평은 인권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에게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가를 일깨워주는 글들입니다.

저는 감히 우리의 『인권연구』가 그동안 척박한 인권 현실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인권’을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특성상 연구는 현장을 떠날 수 없고, 모든 연구는 더 나은 현장을 위한 연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묵묵히 걸으며 『인권연구』의 발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편집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편집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를 받쳐주시고 지켜주시는 인권법학회와 한국인권학회의 모든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한국인권학회장 박경태